

“법무부와 이견으로 신현수사의 표명… 文대통령이 만류”

靑 “신현수 수석 거취 문제 변화 없는 상태” “檢 인사 과정에서 이광철과 내부 이견 없어” “법무장관이 민정수석 패싱? 무리한 해석”

청와대는 17일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이견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검찰(고위 간부) 인사 4명이 됐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다”며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에서 사표가 아니고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그때마다 대통령께서 만류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은 설 연휴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주말

밤에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자신이 ‘패싱’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과정에서도 신 수석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더욱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를 공식 확인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민정수석은 단 한 차례 회의에 빠진 일이 없었고 오늘도 아침 현안회의에 참석했다”며 “거취 문제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신 수석의 사의를 둘러싸고 민정수석실 내부 갈등설이 제기되는데 대해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기사를 보니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옆에 있다”며 “암투가

그러져 있는데, 반부패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두 분은 이미 김종호 민정수석 시절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후임을 찾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있는 상태”라며 “이번(검찰 고위급)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에 이견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 “기사들은 마치 이광철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 사표에 이르게 됐다고 썼다”며 “제 명예를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광철 비서관은 사표를 낸 적도 없고, (검찰 인사에) 이견을 낸 적도 없다. 그렇게 연결시켜주지 말아 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 신 수석과 이 비서관 뜻이 같았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같았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인사 이견이 있었고 그에 따른 사의 표명이 있었다

는 것만 팩트”라며 “나머지 민정수석실 내부와는 전혀 연결시켜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요청했다.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이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최종 조율되지 않은 안이 대통령 선거까지 올라갔고, 그것이 재가되면서 발표에 이르게 됐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사장급 인사 4명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결재받은 사람은 신현수 수석인가, 이광철 비서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보면 법무장관이 안 조율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고했고 발표가 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재가를 올린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또 “대통령도 이러한 갈등 과정을 인지하고 재가했다고 봐도 되느냐” 질문에는 “청와대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 과정을 낱알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신현수 민정수석

이어 “법무부는 법무부 안을 올리는 것이고, 민정수석은 다른 견해가 좀 더 조율됐으면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견 있는 상태에서 발표가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보는 인사 방향과 법무부 인사와 검찰 쪽에서 원하는 인사 사항이 다를 수 있다”며 “민정수석은 중재를 하려는 의도였고, 그게 진행되는 데 (법무부 측에서) 발

표가 돼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 민정수석이 사의를 낸 것 같다”고 추정했다.

‘법무장관이 민정수석을 패싱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패싱보다 조율 중인 상태에서 나갔다고 이해해달라”며 “민정수석실을 경유해 보고되는데 그것을 패싱이라곤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걸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국회의장 내년 대선·지선 동시선거론에 전해철 “검토 사실 없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 내에서 내년 6월1일 전국 지방선거(지선)를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대선)와 동시에 실시하는 안을 논의·검토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는 4월7일 재·보궐선거를 염두한 ‘관련선거’라는 지적에는 반박했고, 원활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

신 접종을 위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특별교부세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의 내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 내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것은 전혀 없다. 국회, 정당 간

4차 재난지원금 ‘관련선거용’ 지적엔 “긴급현안엔 편성 가능”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관위 위탁 및 선거일 통일 검토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선거관리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재차 캐묻자 “정부 내에서 (대선·지선)을 함께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응수했다.

전 장관은 재난지원금 3차 지급 시작 단계에서 4차를 운용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아니겠냐는 비난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게 돼 여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에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비로도 부족한 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행안부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백신 접종 비용

을 보전하려고 한다. 실제 (접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예산 부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별 접종 정보를 제때 안내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국민서비스’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현재 (국민서비스 서비스 내) 챗봇 11종에 대한 테스트 중으로 3월 말까지 완료해 4월초 (개시)할 예정”이라며 “실효성이 없게 나오는 부분은 철저히 보완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비서관 카카오톡·네이버 앱·KT가가지니 등 친숙한 민간 채널로 사전 설정만 해놓으면 각종 행정 정보를 때 맞춰 제공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다.

행안부는 이를 국가예방접종시스템과 연계해 국민 개개인의 보건·질병

권은희 “야권 단일화 무산 없다…安, 유불리 안 따져”

데이터와 예방 접종력을 토대로 접종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안내해준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미국과 유럽처럼 백신을 맞고자 긴 줄을 서서 수십 시간씩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다.

전 장관은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농·수협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선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그간 농·수협 선거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어 선관위 위탁선거를 확대해왔고 (그 결과) 부정선거가 많이 근절됐다”며 “위탁 여부와 함께 선거 시기의 동일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자연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데다 소상공인과 비슷한 규모의 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어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하자 “풍수해보험을 확대하는 게 기본적인 정부 방침으로 현재 20%인 가입률이 30%대까지 가야 한다고 본다”며 “소기업까지 확대하기엔 재정 부담이 증가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야권의) 단일화 무산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 국민의당, 제3지대에 있는 후보까지 단일화된 후보는 서울시장의 100%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부분에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100%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더 구체적인 사항에서 있어서 유리한 부분을 어느 한 일방이 끝까지 고집한다고 하면 단일화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안철수 대표는 야권 단일화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안 대표가 유리함을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무산 가능성 역시 없다”고 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